

공 시 송 달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63조(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)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2월 1일
금융위원회

1. 공시송달 대상자

대상자	주민등록번호	주 소
박홍철	820918-1××××××	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33, ○동 ○호(각화동, 금호타운)

2. 서류의 명칭 :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

3. 서류의 내용 :

1) 대상자 및 처분내용

대상자	처분원인	근거법규	처분내용 (과태료)
박홍철	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449조	25백만원

- 2) 우리 위원회는 귀하에 대하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에 따라 위 1)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하오니, 납입 고지서를 발급받아 2016. 2. 29.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3) 우리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2016. 4. 16.까지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.
- 4)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
 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
 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
 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4조에 따른 감치
- 5)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(02-2156-9878)로, 납입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(02-2156-9574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